



AI 발생 등과 관련한 재산세 감면



협회는 AI 발생 등과 관련한 재산세 감면 내용을 공지하고 AI 피해농가의 신청을 독려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축사포함)에 부과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은 ①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조), ②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31조), ③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이 있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농가는 관련 서식(지방세 감면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을 작성한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과 2014년도에 충북 음성군에서는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아래 추진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AI 피해 재산세 감면 또는 관련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duck.org/main/>) 또는 한국오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 음성군 AI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추진 내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내용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

김만섭 오리협회장, 2022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강의



지난 6월 15일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춘천 세종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강의'에 강사로 초청되어 '오리 산업 현황, 사양관리 및 농장방역'에 대해 강의를 했다.

김만섭 회장은 강의에서 최근까지 지속됐던 HPAI의 발생현황과 시가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리 농가에 불합리한 CCTV 30일 미보관 과태료 처분의 문제점, 분뇨처리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국 오리농가의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로 오리사육을 하고 있어 방역에 취약하고 방역시설 수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리 농가들의 사육시설 현대화 및 개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하여 방역시설 확충 및 다수의 축사동을 1~2개로 줄여야 오리 농장의 시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며 오리 사육시설 현대화 및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2022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강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발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년차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